

광주시,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후 첫 주민설명회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광주시가 해당 주민들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줬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9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최근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음 피해지역 및 종전부지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지난 17일 대통령실이 주관한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18년간 표류해온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공식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박근택 광산갑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민·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광주시는 이날 2023년 광주 군공항특별법 제정, 유치지역 1조원 지원 약속, 광주-전남 '무안' 이전 최초 합의,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 실시, 양부남·박근택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비롯해 공적자 양과 수확 활동, 전통시장 캠페인, 광운면 열린대화방 개소 등 무안 주민과 직



'군공항 6자 협의체' 합의 후 19일 광산구 주민 대상 소통 나서 이전 절차-종전부지 개발-재원조달 방법 등 설명... 주민의견 수렴 강기정 시장 "공항도시 무안-실리콘밸리 광주로 가는 상상 대전환"

접 소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21대 대선 공약 제안 등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6자협의체 구성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 후 18년 만에 실타래가 풀릴 수 있었던 배경을 상세

히 전했다.

강 시장은 이날 무안을 '공항도시'로, 광주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의 대전환 비전을 밝혔다. 광주형 실리콘밸리는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직주락 정주여건과 녹지·문화·여가의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행정 조정에 나선다.

강 시장은 "누군가는 여전히 군공항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라는 첫 씨앗을 심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광주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된다. 우리 자식, 손자들을 위한 미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기자

서구 행복학교, 부모·자녀 동반성장 교육모델 구축

가족 기반 교육 성과 공유, 새로운 교육방향 제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0일 아동·부모 동반 성장교육 프로그램 '함께서구 행복학교'의 1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 나눔회를 개최했다.

행복학교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성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서구형 가족 기반 미래교육 모델이다. 올해 약 500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구는 부모 대상 미래교육 트렌드와 코칭 역량을 강화하는 '부모 행복 학교', 자연 속 도전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자녀 행복학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인성·관계 중심의 '함께 행복학교'를 운영하

며 가족 단위 성장을 지원해 왔다.

이날 성장 나눔회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행복학교 참여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년간의 배움과 변화를 되돌아보며 서로의 성장을 공유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아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실험"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자기다움과 관계의 힘이며, 행복학교는 그 가능성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 시작되는 교육의 변화를 통해 서구형 미래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인프라 개선 125억 지원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받도록 화순전남대병원에 12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수술실 규모 확대와 첨단장비 도입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권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는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등 권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내용은 수술실 규모 확대와 고난도 중증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핵심 장비 도입이다. 주요 장비는 ▲감마나이프 ▲디지털 혈관조영 촬영 장치 ▲엑스선 혈

액조사기 ▲방사면역검사 반자동화 시스템 ▲위·대장내시경 세트 ▲자동유방조음과 시스템 ▲디지털 X-선 진단기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최종 치료를 받도록 의료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심뇌혈관·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북구, LH와 '일시 대피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철도 공사 인근 붕괴 우려 주택 주민 안전 보호 나서

이 지속돼 왔다.

이에 광주시에서 7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13개 건물 중 11개소가 E등급(불량) 2개소가 D등급(미흡)으로 평가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지난 10월 1일 광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거처로 지정한 뒤 대피를 안내했다.

이후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지난 19일 '일시 대피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중흥동과 신안동 일대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 4개 빌라 총 19호가 긴급 거

처로 제공된다.

주택 사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에서 임대보증금 면제 및 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나머지 임대료 50%는 북구가 부담한다. 임대료 재원은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북구는 이번 긴급주거지원과 병행해 붕괴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주 신청 안내 등 행정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현근 기자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AI 헬스케어 기반 인구감소 대응 모델', 일자리 창출 등 기여

사전심사와 발표 심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광역 3개, 기초 10개 자치단체가 본선에 진출했다. 광주 동구는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공모해 전문가

광주 동구는 인구소멸 우려가 높은 구도심 지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지역의 강점인 의료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한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년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유

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AI 기반 라이프로그(Lifelog) 스마트 자가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주민의 일상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기업은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연계 모델이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사업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한국형 혁신형 핵융합로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7개 과제 개발에 3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5개 과제에 8500억 원이 배정된다.

사업 주관은 과기부, 전문 수행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다.

연구시설 공사는 과기부 산하기관이 맡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지 제공부터 도로·전력 등 기반 시설 조성을 담당한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예정지 주민과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2026년 상반기 토지 보상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상 업무 추진 주체는 전남도와 나주

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시·도는 내년 1월께 토지 보상 전담팀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기부의 목표대로 내년 하반기(8월) 예타를 통과하면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에너지 분야 복수의 과학계 관계자들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국가 미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사업인 데다 선진국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예타 통과 가능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핵융합 관련 기업 300여곳이 입주하고 전문 연구 인력과 연관 산업을 포함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1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시스

